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글 | 송윤철 협회 경영기획 실장

중소·벤처기업은 소득분배상의 균형유지를 위한 촉매기능 외에도 생산·고용·유통·가격 등의 면에서 국민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부문간 격차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적인 측면과 중산층 확대와 고용기회 창출이라는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정책자금의 집행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책입안과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정책입안기관·산하기관·공익단체는 자격요건 심사 및 접수 창구기능을 갖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자금대출 업무를, 보증기관은 담보부족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능과 같은 현재의 다원화된 구조는 자금의 수요자에게 있어 중복 방안을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대출체계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지원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기업 중 사업성·기술성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기업평가시스템의 보완이라는 선행조건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자금을 배정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사업계획·기술사업계획서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성·기술성·시장성·경영능력을 기준으로 적정규모의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자금집행의 현장인 금융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담보능력 부분을 기업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금융기관의 고려도가 가장 낮은 미래의 사업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를 요망하는 등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과 기업의 요구기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실제 금융기관은 담보확보 외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둔감하며 회계감사보고서의 의무적 제출여부도 자금규모에 따라 결정하는 이원화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은 규모도 크지만 중앙부처, 산하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과다한 종류로 운용되고 있어 수요자 측면에서는 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의 특성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명칭도 다양하다. 자금을 총괄하는 공급자 입장에서조차 복잡하고 다양한 자금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복잡한 지원체제와 더불어 운용·보증·금융기관의 지원 절차 및 서류도 다원화되어 있어 중소기업들은 절차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자금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언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집행기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정책자금 지원구조는 다원화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일화·통합화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금집행 주체, 자금의 종류, 접수처, 심사·평가기관이 제각기 다른 경우도 있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전용 자금을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전문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자금신청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가동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의 확대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금리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의 결여 등으로 신용대출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금융권에서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하기에는 애로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표준화된 기준의 여심심사 및 신용평가모델의 개발·확산이 필요하며, 신용평가결과에 대해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이 책임을 분담하거나 신용등급에 의한 대

출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출 확대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실채권 회수제도의 합리화는 금융기관의 부실예방 차원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의 신용정보회사의 기능을 정책자금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자금 수요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기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부실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영여건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자금지원제도의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자금제도, 전용자금 내용 외에 자금집행 진행과 예산소진 현황까지 공시함으로써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한 곳에서 일괄적인 정보와 약과 함께 전담 금융기관 한 곳에서 접수·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소기업이 자금계획을 탄력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집행에서 상환까지 수혜기업이 제대로 성장·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체계가 미흡한 것도 현실이므로 수혜기업에 대한 성장관리 점검제도의 시행은 추가예산의 부담, 지원인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사용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단계에서는 시설 및 기술관련 자문에 대한 투자타당성·적정성·수익성·경제성 등을 조사하여 담보제공 없이 대출을 시행하고,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마케팅·재무관리 등의 경영지도를 실시하여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될 때까지인 창업 후 수년 간 전문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책자금 지원목적의 달성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중소기업 발전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